

## 주요 정책 이슈

- 2013.10.18,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-

### ① (9월 고용동향) 고용률 65.0%(0.5%p ↑, 15~64세), 실업률 2.7%(0.2%p ↓)

- (주요 내용) '13.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.3만명 증가하여, 2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

\*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: ('13.5)26.5 (6)36.0 (7)36.7 (8)43.2 (9)46.3

\* 취업자 증감(전월비, 만명): ('13.5)△2.5 (6)6.9 (7)6.9 (8)10.5 (9)7.3

- 제조업은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, 주로 서비스업(보건·복지, 숙박·음식), 임시일용직, 청년층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

- (평가 및 전망) 최근의 고용지표 호조는 구조적 요인보다는 추경 일자리 사업 효과\*, 추석 연휴 등 일시적 요인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

\* 재정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7월부터 채용 시작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은 9월부터 시작

- 꾸준한 고용 증가로 고용률 70%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활성화 해 기업이 경영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(서울경제, 조선일보)

### ② (서비스산업정책) 산업부, 서비스 KS 인증의 기업부담감소 대책 발표

- (주요내용)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장 단위로 받던 KS 인증을 사업자 단위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(산업표준화법 개정안 10월중 입법예고)

-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하나의 인증으로 부담이 경감되며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인증이 가능

- (평가 및 과제) 서비스산업 분야의 인증제도 정비, 표준화 등을 통한 품질향상은 서비스산업 자체는 물론, 제조업 분야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

- 우리나라는 제조업 생산이 서비스 투입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서비스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 (산업연구원)

\* 제조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 중간투입계수(=제조업 생산액/서비스 중간투입액, 2009년) : (한국) 0.109, (미국) 0.200, (독일) 0.247, (일본) 0.173, 중국 (0.104)

- ※ 한편, Deutsche Bank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\*(TPP) 논의 참여 등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평가

\* 규제완화 및 개혁의 중요한 촉매제 가능

### ③ (창조경제 정책) 중기청-외교부, ODA 활용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

- (주요내용) KOICA의 무상원조사업(ODA)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도국 등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수립
  - 중소기업 ODA 활용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구축, 중소기업 가산점 부여 확대, 중소기업 조달전용영역 확대, 분리발주 및 설계공모제 확대 등 추진예정
  - 중소기업 조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, 설명회, 정보제공 등 강화
- (평가 및 과제)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공공조달시장 확대 외에도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노력 필요
  - 중소기업 e-Marketplace 구축 및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강화 필요(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, 8.29)

### ④ (창조경제 정책) 지식재산(IP)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범부처 대책 수립

- (주요 내용) 공공부문의 평가에 대한 시장의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고, 궁극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 경쟁국과 같은 '시장에 의한 평가 체제'로의 이행을 지향
  - 우리나라의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대부분 공공부문 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나,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극히 낮아 기술의 이전·거래·협상, 기술매개 자본 조달, 분쟁 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
  - 이에, 지재위 및 관계부처(미래부, 산업부, 금융위, 특허청 등)는 평가기관, 금융기관,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도출·분석하여 6대 추진과제 도출
  - 수요자 맞춤형 평가체계 수립, 평가준거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, 평가 품질관리제도 도입, 무형재산 투자로 인한 위험완화 기제 마련, 평가대상 제도화와 평가비용 지원 확대, IP·기술거래 활성화 대책 연계 등 추진예정
- (평가 및 과제) IP·기술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는 대기업-벤처·중소기업 간 지식 자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통로 마련(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사항)을 위한 선결조건
  - 우선은 공공분야 위주로 기술가치평가를 하되, 앞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부문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(문화일보)